

2017년 실무종합(경위)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 236-3112

안동 김재규공무원학원 (054) 823-9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1 경찰의 분류와 그 기준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3권분립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 ②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으로 구분한 것이다.
- ③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 ④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은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해설 → ①②③ 옳은 지문이다.

④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은 경찰활동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2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를 경찰의 기본적 임무라고 정의할 때, 위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협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② 구체적 위협이란 구체적 개개 사안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개개의 경우에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③ 위험협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협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 ④ 추상적 위협이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협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협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 ①②③ 옳은 지문이다.

④ 지문과 같은 위협은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오상위험 또는 추정적 위험이다.

3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관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경찰관은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인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

해설

-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 ② 동강령 제8조 제1항
- ③ 동강령 제9조 제1항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동강령 제17조)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4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가설 중 「구조원인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민 사회의 경찰부패에 대한 묵인·조장이 부패의 원인이다.
- ②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
- ③ 부패한 조직 전통 속에서 신입경찰이 사회화되어 부패경찰이 된다.
- ④ 부패가 구조화된 조직에서는 ‘법규와 현실의 괴리’현상이 발생한다.

해설

- ① 시민 사회의 경찰부패에 대한 묵인·조장이 부패의 원인이라는 것은 전체사회가설에 대한 설명이다.
- ②③④ 구조원인가설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5 다음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 경찰공무원의 기본강령으로 제1호에 경찰사명, 제2호에 경찰정신, 제3호에 규율, 제4호에 책임, 제5호에 단결, 제6호에 성실·청렴을 규정하고 있다.
- ㉡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 1일의 휴무,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해설 → ③ 이 지문이 옳다.

- ㉠ 경찰공무원의 기본강령으로 제1호에 경찰사명, 제2호에 경찰정신, 제3호에 규율, 제4호에 단결, 제5호에 책임, 제6호에 성실·정열을 규정하고 있다.(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 ㉡ 동규정 제10조
- ㉢ 동규정 제18조
- ㉣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략)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9조)

6 이후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변천사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이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 ‘내부관제’의 제정을 통해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정비
- ㉡ ‘지방경찰규칙’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 마련
- ㉢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가 시작
- ㉣ 광무개혁 당시 독립된 중앙관청으로서 경부 설치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해설 → ② 내부관제의 제정(1895년) → 지방경찰규칙 제정(1896년) → 경부 설치(1900년) → 통감정치가 시작(1906년) 순서로 진행되었다.

7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 ②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할 것,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할 것,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은 훈령의 실질적 요건이다.
- ③ 하급행정기관은 서로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하는 때에는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하고, 주관상급관청이 서로 상하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근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하며,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④ 하급관청 구성원의 변동이 있으면 훈령은 그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

해설 → ①②③ 옳은 지문이다.

- ④ 훈령은 경찰기관의 의사를 구속하므로 기관 구성원이 변경·교체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8 다음은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6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 ㉡ 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㉔ 경찰, 검찰, 법관,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㉕ 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하고,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㉖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① ㉑(○) ㉒(×) ㉓(○) ㉔(○) ㉕(×)

② ㉑(×) ㉒(○) ㉓(×) ㉔(×) ㉕(○)

③ ㉑(×) ㉒(○) ㉓(×) ㉔(×) ㉕(×)

④ ㉑(×) ㉒(×) ㉓(○) ㉔(○) ㉕(○)

해설 ➡ ③ 이 지문이 옳다.

- ㉑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 제2항)
- ㉒ 동법 제7조 제3항
- ㉓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동법 제6조 제4항 제3호)
- ㉔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 ㉕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이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동법 제9조 제4호)

9 다음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내용이다. 아래 ㉑부터 ㉔까지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㉑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㉒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㉓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㉔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 다음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 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① ㉑(○) ㉒(○) ㉓(○) ㉔(○)

② ㉑(×) ㉒(○) ㉓(○) ㉔(○)

③ ㉑(×) ㉒(○) ㉓(○) ㉔(×)

④ ㉑(×) ㉒(×) ㉓(×) ㉔(○)

해설 ➡ ③ 이 지문이 옳다.

- ㉠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 ㉡ 동징계령 제5조 제2항
- ㉢ 동징계령 제11조 제1항
- ㉣ (중략)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동징계령 제12조 제3항)

10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하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해설** → ①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 ② 동법 제10조 제4항 제2호
 -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3항
 - ④ 동임용령 제20조 제2항

11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의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요양비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② 공무원이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의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③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진다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이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해설** 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의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요양비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
- ② 동법 제72조 제3호
- ③ 동법 제73조 제2항
- ④ 동법 제71조 제2항 제2호, 제72조 제5호

12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 안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가.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이때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 10 ㉡ 5 ㉢ 7 ㉣ 3 ㉤ 5 ㉥ 1

② ㉠ 10 ㉡ 3 ㉢ 7 ㉣ 3 ㉤ 5 ㉥ 1

③ ㉠ 10 ㉡ 3 ㉢ 5 ㉣ 5 ㉤ 7 ㉥ 1

④ ㉠ 7 ㉡ 5 ㉢ 7 ㉣ 3 ㉤ 7 ㉥ 2

해설 ➀ 이 지문이 옳다.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7항
- ㉡㉢ 동법 제11조의2 제2항
- ㉣㉤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 ㉥ 동법 제12조

1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④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해설 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

- ② 동법 제11조의3 제2항

- ③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동법 제11조의3 제4항)
- ④ 동법 제11조의3 제5항

14 조직내부의 갈등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다음 중 갈등의 조정과 통합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더 높은 상위목표를 제시, 상호 간 이해와 양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 ③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갈등을 완화, 양자 간의 타협을 도출,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 ④ 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갈등의 단기적인 대응방안이다.

해설 → ①②③ 옳은 지문이다.

- ④ 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갈등의 장기적인 대응방안이다.

15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 ① 국가재정법 제28조

② 동법 제29조

③ 동법 제31조 제1항

④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16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연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에 배정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주행거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④ 차량운행 시 책임자는 1차 운전자, 2차 선임탑승자(사용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 해설** → ①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0조 제1항
 ② 동규칙 제93조 제1항
 ③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에 배정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차량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동규칙 제94조 제1항)
 ④ 동규칙 제98조 제3항

17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갑 · 포승 · 경찰봉 · 전자충격기는 '경찰장구'에 포함된다.
- ② 권총 · 소총 · 산탄총 · 유탄발사기 · 박격포 · 함포 · 크레모아 · 수류탄 · 폭약류 및 도검은 '무기'에 포함된다.
- ③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을 포함)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은 '분사기 · 최루탄 등'에 포함된다.
- ④ 가스차 · 살수차 · 특수진압차 · 물포 · 석궁 · 전자방패는 '기타 장비'에 포함된다.

- 해설** →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② 동규정 제2조 제2호
 ③ 동규정 제2조 제3호
 ④ 가스차 · 살수차 · 특수진압차 · 물포 · 석궁 · 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는 '기타 장비'에 포함된다.(동규정 제2조 제4호) 전자방패는 '경찰장구'에 포함된다.(동조 제1호)

18 「보안업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I 급 비밀, II 급 비밀, III 급 비밀, 대외비로 구분한다.
- ②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접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I 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이다.
- ④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II 급 비밀이다.

- 해설** →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I 급 비밀, II 급 비밀, III 급 비밀로 구분한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 ②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2조 제3항)
- ③ 경찰청장은 II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이다.(동규정 제9조 제2항)
- ④ 동규정 제4조 제2호

19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
- ②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③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④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해설 ▶

- ① 경찰 감찰 규칙 제4조
- ② 동규칙 제5조 제2항
- ③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동규칙 제10조)
- ④ 동규칙 제8조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③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해설 ▶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② 동법 제17조 제1항
- ③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2항)
- ④ 동법 제2조 제3호

21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
- ②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장기실종아동 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 ③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발생지’란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 ④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발견지’란 실종아동 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 해설** ▶ 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②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5호
 ③ 동규칙 제2조 제7호
 ④ ‘발견지’란 실종아동 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8호)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④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해설** ▶ ① 긴급임시조치는 ②③④ 지문들의 조치를 말한다.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은 판사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일 뿐,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는 아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 ② 위의 “①”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의 “①”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하여야 한다.
- ④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 ①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제2항

- ③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6항)
- ④ 동법 제26조 제2항

24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출국금지 사유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출국심사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해설 ➡ ① 이 지문이 옳다.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25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에는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④ 피호송자가 경증으로 발병하여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해설 ➡ ①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65조 제1호

- ② 동규칙 제49조 제1항
 ③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70조 제1항)
 ④ 동규칙 제65조 제3호

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해학생에 대한 구두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③ 사회봉사
- ④ 학급교체

해설 ▶ 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아래와 같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2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해설 ▶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 제2항

- ② 동법 제9조 제1항
- ③ 동법 제9조 제4항
- ④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제3호)

28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심각단계에는 반드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그 밖의 단계에는 경비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주의단계”는 일부지역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
- ③ “경계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 ④ “심각단계”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를 말한다.

해설 ▶ ①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9조 제2항

- ② ‘주의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동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
- ③ 동규칙 제9조 제2항 제3호
- ④ 동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

29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A급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B급 다중이용시설이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③ C급 다중이용시설이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④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는 위기관리센터에 비상설로 두며 위원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한다.

- 해설** → ①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A급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 ②③ 동규칙 제9조 제1항
 - ④ 동규칙 제14조 제1항

3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② 제1종 소형면허로 3륜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③ 제2종 소형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 ④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2명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해설** → ④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 [참고]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제1종	소형 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보통 면허	1. 승용자동차 2. <u>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u>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 면허	1. 이륜자동차 2. 원동기장치자전거

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면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②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③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 ④ 보조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해설 ④ 보조표지는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호)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는 주의표지이다.(동항 제1호)

32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が必要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③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④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설 ① 청원경찰법 제4조 제3항
② 동법 제8조 제1항

- ③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 ④ 동법 제3조

33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 조사를 한다.
-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의 “③”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해설 ▶

- ①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1항
- ② 동규정 제33조 제2항
- ③ 동규정 제34조 제1항
- ④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동규정 제34조 제2항)

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 ②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를 말한다.
-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 ④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

-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② 동법 제2조 제5호
- ③ 동법 제3조 제3항
- ④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1조 제1호)

35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라미드형 -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② 단일형 -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 ③ 삼각형 -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은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 검거 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 ④ 레포형 -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침투하고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활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며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한 반면,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해설 ➤ ①②③ 옳은 지문이다.

- ④ 지문은 씨클형 간첩망 형태를 말한다.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중형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36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해설 ➤ ① 보안관찰법 제14조 제1항

- ② 동법 제5조 제2항
- ③ 동법 제17조 제3항
- ④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3조)

3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② A-2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 ③ E-9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④ 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해설 → ①②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③ 예술흥행(E-6)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2조) 비전문취업(E-9)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한 체류자격이다.

38 「국적법」상 일반귀화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품행이 단정할 것
 ②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④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해설 → ①②③ 국적법 제5조

- ④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동법 제5조 제1호)

39 「범죄인 인도법」상 아래 ㉠부터 ㉤까지 설명으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A)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B)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① A - ㉠㉣ B - ㉡㉢㉤
 ② A - ㉠㉤ B - ㉡㉢㉣
 ③ A - ㉡㉢ B - ㉠㉣㉤
 ④ A - ㉡㉣ B - ㉠㉢㉤

해설 → ① 이 지문이 옳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9조)

[참고] 인도거절 사유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A)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B)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3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언론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언론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언론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

-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②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동법 제7조 제4항)
- ③ 동법 제7조 제5항
- ④ 동법 제7조 제9항